폭염 속 허울뿐인 '재난도우미'… 제도 정비 시급

이·통장 등 기존 인력에 이름만 얹어…가이드라인 전무
업무 과중·활동 제약·책임감만 부여…매뉴얼 마련 절실

정부가 폭염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재난도우미' 제도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부채로 더위를 식히고 있는 폭염 취약계층.

정부가 폭염에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재난도우미' 제도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시행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나 교육 없이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폭염 대책 중 하나로 재난도우미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재난도우미는 독거 어르신,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전화, 방문 등을 통해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지자체가 자율방재단과 이·통장, 공무원 등 기존의 취약계층 관련 인력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다 보니 기존의 업무에 이름만 더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올해 광주 5개 자치구에 지정된 재난도우미는 총 3565명(동구 622명, 서구 771명, 남구 870명, 북구 1289명, 광산구 13명)이다.

이중 폭염과 관련, 건강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생활지원사, 방문돌보미 간호사 등은 833명(동구 116명, 서구 219명, 남구 196명, 북구 289명, 광산구 13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732명은 이·통장, 사회복지사, 공무원, 지역 자율방재단 등이 관련 역할을 겸하고 있다.

더구나 생활지원사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재난도우미에 비해 지역 내 관리대상자가 7만3000여명에 이르지만, 하루 평균 2~3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방문 혜택을 받는 인원은 1600여명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전화 상담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또 제도를 주관하는 행안부는 재난도우미 현황만 확인할 뿐 활용 방안, 교육 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을 비롯해 전체적인 관리 매뉴얼도 없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 안내지침서'에서도 직접 방문, 전화 방문 등 대략적인 설명만 있을 뿐 각 항목별 가이드라인은 전무했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가 이를 표준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존의 취약계층 관련 인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됐다는 공문만 내려올 뿐, 구체적인 교육이나 관리 등에 대해 지자체에 떠넘기기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현장 업무자들의 고생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장 대응에 나가도 법적 권한이 없이 책임감만 부여되니 활동에 제약이 많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도우미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지역에서는 총 15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0명, 2023년 64명, 지난해 70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해외 밀반입·유통 마약사범 잇따라 검거

광주지검·전남경찰청…무허가 공기총 등 압수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투약한 마약사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0일 불법체류 외국인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밀수·유통 사범을 30명을 입건하고, 17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태국 마약 밀수조직으로부터 2억3000만원 상당의 야바 1만17정과 필로폰 310g 등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유흥가 일대에서 케타민 약 300g을 소지하며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등에게 1171만원 상당의 약 58g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공급책과 이를 매수·투약한 유흥주점 종업원·손님 등 총 20명을 적발하고 이중 8명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이 소지한 약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야바와 필로폰, 케타민 등 합계 3억55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이후 광주지검은 재판에서 마약 사범에게 징역 6년~1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도 이날 해외에서 밀반입한 야바, 필로폰 등 마약을 대포 차량으로 전국 각지에 유통한 태국인 등 32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67.7g과 2300만원 상당의 야바 467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대포 차량에 보관돼 있던 무허가 사제공기총도 발견·압수했다.

경찰은 국정원과 출입국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소매 판매책을 기점으로 수사를 확대해 수도권과 광주, 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국내 총책, 중간 판매책, 소매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비대면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3월24일부터 이날까지 '국제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조직원 등 마약사범 108명을 검거했다.

해당 조직원들을 포함해 피의자 44명을 입건하고, 해외 의약품을 밀반입해 동남아 식품마트에 공급·판매한 64명(한국인 38명·외국인 26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전남 건설기계 노조 5일 총파업 예고

1000여명 참여…레미콘·굴삭기 등 500대 동원 투쟁

광주·전남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최악의 고용 절벽과 악성 체불 증가로 인한 생존권 위협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오는 7월5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3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건설기계노동자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고통을 받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여전히 최악의 건설경기와 악성 체불 증가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면서 "수개월째 일하지 못해 장비가 녹슬어가고 있는 노동자들과 일을 하고도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해 목숨과도 같은 장비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노동자가 한둘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동광주~광산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전남·일신방직 부지 개발 소식이 지역 건설기계 노동자들에게 일말의 희망이었지만 국비 예산 전액삭감으로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지부는 "무책임한 행정처리로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광주시가 지역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는 오는 5일 전체 현장을 멈추고 건설기계 노동자 1000여명과 덤프, 레미콘, 펌프카,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 500여대를 동원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

"불법 도청·행정동 강제 이전" 규탄

조선대병원 노조, 조속한 사과·대책 마련 등 촉구

조선대학교병원 노조가 불법 도청과 인사 개입, 행정동 장례식장 강제 이전 등 최근 병원 내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규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학교병원지부는 30일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도청, 인사 개입, 행정동 이전 추진 등 일련의 사안이 병원 구성원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평가 항목과 국가 예산 지원을 이유로 들며 의사 당직실을 위해 본관 8층 행정동을 옆 건물 장례식장 2층으로 강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련 환경 개선사업을 앞세워 퇴직 후 재임용된 임상전문교수 등 당직실을 만드는 등 특정 교수를 위한 배려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불법 도청 의혹과 인사개입 문제에 대한 병원 측의 대응도 촉구했다.

노조는 "부서장이 직원들을 불법 도청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지금도 같은 층에서 근무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최근 간호부 정기 인사로 부서를 발령받은 한 간호사는 해당 진료과 요청으로 다른 부서로 파견 조치 됐고 다른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일부 부서의 요청에 따라 인사가 철회된 것은 공정한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조선대병원의 시간은 시대를 역주행하고 있다. 논란 중인 사안들에 대해 조속한 사과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지역 맞춤교육 산실 '광산교육지원센터' 개소

서부교육지원청 오늘부터 운영…광역시 단위 최초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왼쪽부터 4번째) 이 30일 하남3지구에 위치한 광산교육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시의원, 광산구의장 등 내빈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고 있다.

광산구 지역 교육 현안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광산교육지원센터가 오는 7월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광역시 단위에서 교육행정지원센터가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은 30일 하남3지구에서 광산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정선 교육감, 광주시의회 명진 교육문화위원장,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장, 광산구청 김석웅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지원센터 구축 추진 경과보고 △광산교육지원센터 업무 소개 △광산교육지원센터 현장 점검 순으로 진행됐다.

광산구지역 교육행정은 1988년 광산군이 광주직할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광산교육청을 흡수·통합했다.

이후 다문화 학생이 많아지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센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평생교육지원팀, 국제교육지원팀, 유치원지원팀 등 3개 팀으로 나눠 운영되며, 교육국제화 특구, 유보통합, 다문화 등 광산구 지역 교육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또 광산구 맞춤 교육정책을 발굴·지원하고, 광산구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광산교육지원센터 설립으로 광산구 지역민의 숙원과제가 해소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산교육지원센터는 미래 세대가 꿈을 키우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며 "광산교육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교육행정서비스의 현장 접근성 강화,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등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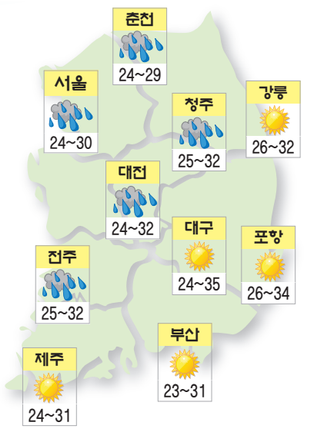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SOCIETY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

	해뜸	해짐	달뜸	달짐
	05:22	19:51	11:08	23:42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광주	24~35
	목포	24~35
	여수	23~29
전남	순천	24~32
	구례	23~35
	해남	23~33
	완도	23~33
	흑산도	21~27
	고흥	23~32
	진도	23~31

목포	밀물(고)	06:24 / 18:30
	썰물(저)	11:37 / 23:39
여수	밀물(고)	00:54 / 13:10
	썰물(저)	06:59 / 19:05

담배꽁초에 상가 '화르륵'

만년필 ○…한낮에 광주의 한 상가에서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져.

30일 광주 동부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8분 광주 동구 불로동 한 상가 3층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

소방당국은 소방장비 13대, 소방대원 42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2분 만인 오후 2시50분 불길을 잡아. 이 불로 상가 3층 옥상 구조물 일부가 소실돼 소방 추산 155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 송태영 기자 sty1235@

여성 후배에게 꽃뱀 발언? 대학원생 징계취소 승소

대학원 여성 후배에게 '꽃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전남대학교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대학원생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4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중이던 A씨는 같은 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꽃뱀'이라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발언과 욕설을 내뱉은 사실이 인정돼 무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인터넷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 내용 뿐, 실제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인터넷 커뮤니티 익명 게시글 내용뿐이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